



주간 통일정세

2012-29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김정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시찰(7/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8일 평양에 있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 김 1위원장은 기념관에서 항일무장투쟁시기관, 민주주의혁명시기관, 작전관, 군종병종관, 승리관, 중국인민지원군관 등 여러 곳을 둘러보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며 기념관을 현대적으로 개축하는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앙통신은 김 1위원장을 현지에서 기념관 일꾼들이 맞았다고 전했다. 수행자 명단을 따로 밝히지 않음.

- **모란봉악단 공연은 김정일 명제 실천한 것(7/11, 조선신보)**
 - 북한 모란봉악단이 지난 6일 서구의 만화영화 등을 활용해 파격적으로 선보인 공연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명제를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11일 보도했다.
 - 조선신보는 이날 '제1위원장의 발전전략은 장군님의 친필명제 관철'이라는 글에서 "김일성 주석님 탄생 100돌을 경축하는 열병식장에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의 구호가 울려 퍼진 이래 조선에서는 세계를 향한 새로운 도전과 분별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며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그 단적인 실례"라고 평가함.
 - 신문은 이어 김 1위원장이 최근 현지지도에서 '세계적 추세를 강조하는 것을 개혁·개방 가능성과 억지로 결부하는 논조가 있다'며 "경제와 문화 등 국가건설의 모든 영역에서 세계적 추세를 따라 앞서나갈 데 대한 방침은 돌연히 나온 것이 아니다. 김정일 장군님께서 벌써 제시했다"고 주장함.

- **北청년동맹 대표자회 10년 만에 열려(7/12,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자회가 12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등 북한 매체가 전함.
 - 대표자회에는 최영림 내각총리, 김기남 노동당 선전비서, 이영수 노동당 근로단체 부장 등이 참석함.
 - 대표자회에서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주체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 나가기 위한 청년동맹의 과업'과 '청년동맹 규약



개정' 등 2가지 의정을 결정함.

- **北장성택, 김정남에 체제비판 자제 요구(7/14, 요미우리신문)**
 - 북한 김정은 체제의 실세인 장성택이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에게 체제 비판을 자제하라고 충고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함.
 - 이 신문은 중국 광저우발 기사에서 마카오의 북한 소식통 등을 인용해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2개월 전 일시 귀국한 김정남에게 외국 매체에 세습 비판 등의 발언을 삼가도록 충고했다고 전함.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후견인인 장성택 부위원장은 김정남에게 특히 권력 세습과 조선인민군 등 체제의 근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말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짐.

- **김정은, 전역 인민군 군인과 기념촬영(7/14, 조선중앙방송)**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만수대언덕에서 제대하는 인민내무군 군인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4일 전함.
 - 중앙방송은 이날 "김 1위원장이 중요대상 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내무군의 모범적인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며 "복무를 마치는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전함.
 - 기념촬영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리병삼 인민보안부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겸 당 책임비서, 리경화 군 소장(우리의 준장에 해당), 박춘홍 당 부부장 등이 함께함.

- **'아사자 발생' 北황해남도 당비서 박영호로 교체(7/15,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황해남도 당 책임비서를 로배권에서 박영호로 교체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박영호 신임 황남도 당 책임비서의 구체적인 경력은 알려지지 않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13일 황해남도에 건설된 황남청년제염소 준공 소식을 전하면서 황해남도 당 책임비서를 박영호로 소개함.

- **김정은, 창전거리 유치원 또 현지도(7/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경상유치원을 현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전함.
 - 김 1위원장은 40여 일 만에 이곳을 다시 찾은 데 대해 "학령 전 어린이들의 지능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일을 잘하고 있는 리강죽 원장을 내세워주고 싶어서"라고 말했다고 통신이 전함.
 - 통신은 또 김 1위원장이 이날 유치원 실내온도가 선선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리 원장이 "저도 모르게 '냉온보장조건이 원만하지 못하다'고 솔직히 말했다"고 전함.



- **김정은 현지지도에 '미스터리 여인' 또 등장(7/15,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5일 오전 김 1위원장의 평양 창전거리 경상유치원 현지지도 영상을 방영하면서 2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김 1위원장을 수행하는 장면을 공개함.
 - 노란색 물방울무늬 원피스와 하얀색 카디건 차림에 하이힐을 신은 이 여성은 현지지도 내내 김 1위원장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함.

■ **김정은동향**

- 7/11, 김정은 제1위원장, 만수대지구 건설을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7.11,중방)
- 7/12,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말씀 관철을 위한 인민내무군 군인 건설자들·평양양말공장·평양아동백화점 종업원 궤기모임 각각 진행(7.12,중방)
- 7/13, 김정은 제1위원장, '모범학습 강사들'에게 '감사' 전달(7.13,중방)
- 7/15, 김정은 제1위원장, 만수대언덕에서 '중요대상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인민내무군 모범적 군인들과 기념사진' 촬영(7.14,중방·중통)
 - 최룡해(총정치국장),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리명수(인민보안부장), 리병삼(내무군 정치국장), 리경하(소장), 박춘홍(당 부부장) 등 참석
 - 김정은, 만수대지구 건설에서 모범을 보인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7.15,중방)
- 7/15, 김정은 제1위원장, 경상유치원 재방문(7.15,중통·중방)
 - 최룡해(총정치국장), 리제일(당 제1부부장), 박춘홍(당 부부장) 등 동행/5.30 첫 방문
- 7/16, 김정은 제1위원장, "중요대상건설에서 노력적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내무군 3154군부대 군인들"에게 '감사문' 전달(7.16,중방·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北대표단(단장 : 박의춘 외무상), 7.10 캄보디아 방문 및 아세안지역 연단 상회의(캄보디아 프놈펜 개막/ARF) 참가차 평양출발(7.10,중통·평방)
- 北 「청년동맹」 대표자회, 7.12 최룡해(총정치국장)·김기남(黨비서)·리영수(黨부장) 등 참가下 전용남(청년동맹 1비서)의 첫째 의정 보고 및 둘째 의정 토론 등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7.12,중방·평방·중통)
- 北 노동당 정치국회의 7.15 진행, 리영호(黨 중앙군사총 부위원장)의 "신병관계로 모든 직무 해임" 결정(7.16,중통·중방)



나. 경제

● 北, 중국 의식해 장거리로켓 재발사 미뤄(7/11, 좋은벗들)

- 북한의 노동당 한 간부가 장거리 로켓 발사를 재추진하지 않는 것은 "북중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대북인권단체 (사)좋은벗들이 11일 전함.
- 이 단체가 운영하는 북한연구소의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463호)에 따르면 중앙당의 한 간부는 "중국은 우리가 필요할 때 제대로 도와준 적이 없다는 것이 일부 간부의 인식이었다"며 "그러나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우리에게 득 될 것이 없다"고 말함.
- 특히 "광명성 3호 2차 발사를 미루고 있는 것도 조중관계를 의식해서"라며 "일부 갈등 기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에서 보듯 조중우호 협력관계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임.

● 北, 영변 경수로 건물 외형 대부분 완성(7/12, 후지TV)

- 북한이 영변에 건설 중인 경수로 윗부분을 돔으로 덮는 등 건물을 거의 완성했다고 교도통신과 후지TV가 12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 이 돔은 최근까지 건물 옆에 놓여 있었지만, 이달 들어 건물 윗부분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됨.

다. 사회·문화

● 北경제특구 관리 100명, 작년 말부터 중서 연수(7/9, 동방조보)

- 북한의 황금평·위화도특구, 나선특구 담당 관리 100명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 동북지역 대학에서 교대로 경제특구 관련 연수를 받았다고 중국 동방조보(東方早報)가 9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양 경제특구 담당 관리들은 한번에 19~20명씩 조를 편성해 17~20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상무부가 위탁한 지린성 창춘(長春)과 랴오닝성 다롄(大連) 소재 대학에서 모두 5차례 연수를 받음.
- 연수는 중국의 경제특구 관리 모델과 개발 전략 등에 대한 이론교육을 위주로 하면서 다롄, 쑤저우(蘇州), 베이징 등 중국 내 선진 경제특구를 견학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자본주의 무대 뺨친 북한판 '걸그룹' 공연(7/11, 연합뉴스)

- 지난 6일 평양에서 첫 무대에 오른 신생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은 자본주의 나라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장면들이 공연 내내 이어졌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함.
- 이 악단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지도하며 만들었는데 20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는 10여 명의 여성은 하나같이 가슴선이 노출되거나 어깨 부분이 깊이 파인 드레스와 미니원피스를 걸치고 있었음.
- 북한의 대중문화가 한결같이 추구해온 집단주의적 요소가 이번 공연에



서는 별로 보이지 않았고 마이크와 악기를 든 여성 한 명 한 명이 무대 위를 중형무진 누비며 독자적인 공연에 흥겹게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줌.
- 공연 말미에는 '백설공주' '미키 마우스' 등 미국의 만화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함.

● **北 "일부지역 폭우...신의주에 122mm"(7/11, 조선중앙통신)**

- 10일 오후부터 11일 새벽 사이에 북한의 일부 해안지역에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통신은 "강수량을 보면 평안북도 신의주에 122mm, 황해도 장연군에 104mm, 함경남도 고원군에 100mm"라며 "10일 자정부터 3시간 동안 신의주에 61mm의 비가 내렸고, 오전 3~6시에 고원군과 강원도 천내군에 각각 74mm와 59mm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전함.

● **北김정은 관람 공연에 美 '록키'도 등장(종합)(7/12, 연합뉴스)**

-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관람한 북한악단의 공연에서 미국의 대표적 상업 영화인 '록키'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주제곡과 함께 상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2일 전함.
- 미국을 '미제'라 맹비난하는 북한이 공식무대에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미국영화를 소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임.
-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9일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 내용 중 주요 장면을 방영한 데 이어 11일 밤에 전체 내용을 녹화방영함.

● **北, 금강산관광 항공노선도 개통(7/13,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중국 연변천우국제여행사 총지배인을 단장으로 하는 제1차 비행기에 의한 연지~금강산 국제관광단이 12일 평양에 도착했다"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김광윤 등이 관광단을 맞았다"고 밝힘.
- 신문은 관광단이 송도원, 시중호를 비롯한 동해안 명승지와 구룡연, 만물상, 삼일포, 해금강 등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전함.

● **北中합작영화 '아리랑' 이번엔 중국서 시사회(7/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박춘남 문화성 부상 겸 영화총국 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영화대표단이 중국에서 열리는 북중합작예술영화 '평양에서의 약속' 시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4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전함.



2. 대외정세

가. 일반

- **北박의춘, ARF 참석 위해 평양 출발(7/10, 조선중앙통신)**
 - 박의춘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막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대표단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박 외무상 외에 김명길 아태국장, 이종렬 주아세안대사, 홍기철 주캄보디아 대사 등 10여 명이 대표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최근 8년간 北투자 외국기업 351개(7/12, 미국의소리(VOA))**
 -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8년간 합작 형태로 북한에 투자한 외국 기업은 351개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오픈소스센터'를 인용해 보도함.
 - 오픈소스센터는 최근 '북한-2004년부터 2011년까지 외국기업과 합작투자의 성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적이 확인된 269개 외국기업 가운데 중국기업이 205개(76%)로 가장 많았다고 소개함.
 - 중국기업 다음으로는 일본기업(15개)과 한국기업(10개)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고 이탈리아 기업과 영국기업이 각각 7개로 파악됨.

- **차외무상 캄보디아 국왕과 담화(7/15, 조선중앙통신)**
 - 노로돔 시아모니 캄보디아 국왕이 지난 14일 의례 방문한 박의춘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전함.
 - 시아모니 국왕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함께 양측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게 된 것을 최상의 영광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으며 박 외무상은 앞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도 담화를 나눔.



■ 기타 (대외 일반)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미국의 '한미합동군사연습 및 무력증강' 등 한반도주변 군사적 움직임 비난과 '한반도 정세를 긴장격화 시키는 장본인'이라고 책임 전가(7.9, 중통/조선반도 정세악화의 책임을 절대로 회피할 수 없다)
- 미국의 요격미사일시험(6.26)에 대해서도 "우리(北)의 자위적 전쟁억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재차 위협 강조(7.9, 중통 · 민주조선/요격미사일 시험을 강행한 미국의 속심)
- 韓日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 해상연합훈련 실시를 '일본 반동들에게 재침의 길을 열어주고 민족의 운명을 놓고 도박을 벌이는 범죄행위'라고 거듭 비난(7.11, 중통·노동신문/일본과의 군사적 결탁은 용납못할 반역행)

나. 6자회담(북핵)

● 박의춘 "北, 6자회담 재개 준비돼 있어"(7/14, 연합뉴스)

-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14일 북핵 6자회담에 북한이 재합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박 외무상은 이날 호남흥 캄보디아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캄보디아 외무부 대변인이 전함.

● 中, 김정은 방중 대신 핵실험 중단 요구(종합)(7/15, 도쿄신문)

- 중국이 북한에 대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방중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3차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15일 '복수의 북중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중국이 지난 4월20~24일 북한의 김영일 조선노동당 국제비서의 방중 당시 이처럼 요구했다고 전함.
- 신문은 또 북한이 중국의 요구에 반발하면서도 김 제1위원장의 방중이 중요한 외교 과제라는 점에서 당분간 핵실험을 미루고 있다면서, 핵실험 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사전에 알리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한 채 협의 중이라는 정보도 있다고 덧붙였다.

3. 대남정세

● 남북 인적왕래 2007년 이후 최저치 기록할 듯(7/10, 연합뉴스)

- 올해 1~5월 남북한을 오간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함.
- 10일 통일부가 집계한 남북교류현황(1~5월)에 따르면 올해 북한을 방



문화거나 남한을 찾은 남북한 사람은 총 4만7천43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5만925명에 비해 3천493명(6.9%) 줄어든 것임.

- 분야별로 보면 경제활동을 위해 남북을 오간 인원이 작년 5만849명에서 올해 4만7천404명으로 3천445명 줄었고, 대북지원이나 사회문화교류 등을 위해 왕래한 인원도 63명에서 28명으로 35명 줄었음.

● 금강산 투자업체들, 내일 현지방문 무산(7/10, 연합뉴스)

- 금강산관광 중단 4주년(12일)을 맞아 금강산 투자기업들이 추진해온 11일 금강산 방문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함.
- 10일 통일부와 금강산기업인협의회(금기협)에 따르면 북측은 금기협 측이 전달한 금강산 방문 계획에 대해 이날 오후까지 답변을 해오지 않았는데 정부는 북측이 방북 허가를 해주면 우리 기업들의 금강산 방문을 허용할 방침이었음.
- 북측은 개성공단 채널을 통해 "평양에서 방북 승인 여부에 대한 답이 없다"는 설명을 해온 것으로 알려짐.

●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측에 첫 세금(7/11, 연합뉴스)

-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후 남측 입주기업들이 처음으로 북측에 세금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함.
-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A사는 2010년 회계연도 이윤에 대해 지난해 북측에 7천달러 가량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함.
- 기계업종인 A사는 2009년까지 5년간 이윤이 발생했고, 이후 '3년간 50% 감면' 규정에 따라 지난해 기업소득세의 50%만 납부한 것으로 전해짐.

● 北 차관상환 침묵.. "채무불이행 선언 사유 발생"(7/15, 연합뉴스)

- 상환 만기가 지난 대북 식량차관에 대해 북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채권자인 우리 정부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함.
- 정부 당국자는 15일 "식량차관 첫 원리금(583만4천달러) 상환일이 지난 달 7일 도래했고, 이를 알리는 대북 통지문을 같은 달 15일 북측이 수령했지만 북측이 상환 여부에 대해 오늘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차관계약서에는 북한이 상환 통지문을 받은 시점부터 30일간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북측이 오늘까지 답변이 없어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를 선언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함.



■ 기타 (대남)

- '韓美 행정협정(SOFA)' 체결 46주년 관련 "미제 침략군의 특권적 지위를 합법화한 매국문서"라며 '주한미군 철수' 선동(7.9, 중통·노동신문/불행과 고통의 화근을 들어내야 한다)
 - '시급히 폐기되어야 할 현대판 노예문서' 및 '예속적이며 굴욕적인 협정' 題下로도 '한미 행정협정 폐기 및 주한미군 철수 투쟁전개' 준동(7.9, 중·평방)
- 남측의 '北 주민들 유인 납치, 탈북' 억지 주장과 "역적패당의 어떠한 책동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동(7.12, 평방·민주조선/납치범의 정체를 가리울 수 없다)
 - '6.25 남침' 戰死 미군장교 동상 건립(경기 오산)은 "종미에 환장한 매국노들의 망동"이라고 비난(7.12, 평방/역적패당의 역겨운 추태)
- 박의춘(외무상),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청산'을 주장하며 3가지 문제점 천명(7.13, 중통)
 -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의 △ 목적과 그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 △ 청산하는 것이 조선반도 문제해결의 기본열쇠 △ 청산은 조-미 사이의 전쟁상태를 종결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임성남, 유럽 3개국 방문..북핵문제 협의(7/13)

- 우리 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5일부터 일주일간 유럽 3개국을 방문해 북핵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임 본부장은 방문 기간 프랑스 외교부 전략중국장, 독일 외교부 정부차관보, 영국 외교부 이태담당 국무상 등과 잇따라 만나 북한의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북핵 문제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임 본부장은 유럽의 북한 관련 민간 전문가 등도 만날 계획임. 외교부 관계자는 13일 "유럽의 주요 국가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상임·비상임 이사국을 맡고 있다"면서 "이번 방문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함.

● 박의춘 "北, 6자회담 재개 준비돼 있어"(7/14)

-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14일 북핵 6자회담에 북한이 재 합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박 외무상은 이날 호남흥 캄보디아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캄보디아 외무부 대변인이 전함. 호 외무장관은 이런 북한의 6자회담 재개 입장을 환영함. 박 외무상은 또 지난 6월 이뤄진 호 장관의 북한 방문 결과를 언급하면서 농업과 산업 분야에서 양자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호 장관이 제안을 내놓은 데 대해 사의를 표함. 두 사람은 이날 양자 무역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박의춘은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회의 참석 뒤 캄보디아 공식 방문 일정에 나섬.

● "中, 김정은 방중 조건 핵실험중단 요구"(7/15)

- 중국이 북한에 대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방중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3차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도쿄 신문이 15일 '북측의 북, 중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중국이 지난 4월20~24일 북한의 김영일 조선노동당 국제비서의 방중 당시 이처럼 요구했다고 전함. 신문은 또 북한이 중국의 요구에 반발하면서도 김 제1위원장의 방중이 중요한 외교 과제라는 점에서 당분간 핵실험을 미루고 있다면서, 핵실험 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사전에 알려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한 채 협의 중이라는 정보도 있



다고 덧붙였음. 외교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은 2006년과 2009년의 핵실험 때에는 그 직전에서만 중국에 핵실험 사실을 알림.

- 도쿄 신문은 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6월9일 핵실험은 계획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한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향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내 북한 전문가의 해설을 전함. 하지만 신문은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담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함.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금시초문으로 방중과 핵실험 중단을 '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힘. 그는 "외교 상식으로 볼 때 만약 김정은이 방중하면 중국은 당연히 북한이 실험뿐 아니라 다른 도발도 하지 않는 것을 기대할 것"이라면서 "이런 상식을 극화해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 같다"고 말함. 그는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아직 김정은을 만난 중국 고위 인사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정상회담으로 가겠는가."라면서 "중국 지도부가 10월이면 바뀌는 것도 김정은 방중의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함.

나. 중·북 관계

● "北경제특구 관리 100명, 작년 말부터 中서 연수"(7/9)

- 북한의 황금평·위화도특구, 나선특구 담당 관리 100명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 동북지역 대학에서 교대로 경제특구 관련 연수를 받았다고 중국 동방조보(東方早報)가 9일 보도함.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양 경제특구 담당 관리들은 한번에 19~20명씩 조를 편성해 17~20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상무부가 위탁한 지린성 창춘(長春)과 라오닝성 다롄(大連) 소재 대학에서 모두 5차례 연수를 받았음. 연수는 중국의 경제특구 관리 모델과 개발 전략 등에 대한 이론교육을 위주로 하면서 다롄, 쑤저우(蘇州), 베이징 등 중국 내 선진 경제특구를 견학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음. 지난해에는 11~12월 창춘과 다롄 소재 대학에서 각각 2차례 연수가 진행됐고, 올해 들어서는 신문은 연수를 진행한 대학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들이 양 경제특구를 관리하는 하위 간부이며, 연수는 중국 상무부가 주관한 일종의 훈련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음. 창춘 소재 대학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연수 목표와 대상을 분명히 하고 인원도 양 경제특구 관리로 엄격해 제한한 점을 지적하며 "북한이 더 많은 간부를 중국에 보내 훈련받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이에 앞서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 상무부의 초청으로 북한 무역성의 경제 관료와 학자 등 20명이 지난 5월 하순부터 중국 텐진(天津)에서 경제특구 관련 연수를 받고 있다고 밝혀 양국이 기존 경험 프로젝트를 착실히 추진하며 제도 정비와 인력 양성 등 내실을 다지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 **北中 우호협력협약 체결 51주년 기념연회 열려(7/10)**

- 북한과 중국의 우호협력상호지원협약 체결 51주년 기념연회가 9일 베이징(北京)의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열렸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0일 보도했음. 연회는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가 주관한 것으로 중국 측에서 바이리천(白立침<心변에 甚>)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이 참석했음. 중국은 지난해 7월 50주년을 기념하려고 장더장(張德江)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한 바 있음. 당시 대표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음.

● **中환구시보, 北 김정은 부인 논란 사진 1면 게재(7/11)**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공개 행사에 여성을 동반 한 사진을 보도해 해당 여성이 누구인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의 환구시보(環球時報)가 11일 문제의 사진을 1면에 크게 실음. 환구시보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상업적 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국제문제와 관련해서 유력한 신문매체라는 점에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림. 이 신문은 4면에 3단 크기로 한국·미국·일본 등 언론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지난 6일 평양의 모란봉악단 창단 시범공연 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젊은 여성과 함께 와 공연을 관람했다면서 그로 인해 해당 여성이 누구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함. 신문은 특히 친동생인 김여정 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인 또는 연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함.
- 그러나 중국의 주요 지도자들이 공개행사에 동생과 동행하고 그와 관련한 사진이 보도 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사진은 부부 관계를 암시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옴. 중국에서는 기사를 통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사진 이미지로 권력층 동향을 보도하는 게 관례화돼 있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2009년 결혼해 이듬해인 2010년 딸을 얻었다는 얘기가 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일각에서는 해당 여성이 김정은 제1위원장과 함께 스위스 유학 경험이 있는 올해 25살인 친여동생 김여정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음.

● **北 박의춘 "중의 가치 있는 지원·원조에 감사"(7/12)**

-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북-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은 중 국이 최근 수년간 경제·사회 분야에서 보내준 가치 있는 지원과 원조에 고마워한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2일 보도함. 박 외무상은 11일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북-중 우호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힘. 박 외무상은 "북-중 관계는 깨지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지역 및 국제문제에서 중국과 소통·조화를 강화해갈 것"이라고 강조함.
- 이에 양 부장은 "북-중 관계가 양호하며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 다"고 평가하면서 "중국 역시 북한과의 전통 우호 관계를 중시한다."고 화답함. 양 부장은 이어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서도 전



통을 잇고 미래로 나아가면서 선린우호와 협력을 증진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양자관계를 지속 발전시키자"고 강조함. 양 부장의 이런 언급은 김정은 지도체제의 등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됨. 양 부장은 아울러 북핵 6자회담과 관련, "한반도 긴장 완화가 모든 각 측의 이해에 들어맞는다."며 "중국은 한반도평화와 안정을 위해 각 이해당사국과 소통과 조화를 강화하고 북핵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함. 김정은 지도체제 이후 북-중 외교장관이 회담한 것은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짐. 북-중 양국의 외교장관은 이날 오후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할 예정임.

다. 러·북 관계

● <북한단신> 김영남, 푸틴 대통령에 위로전문(7/10)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최근 러시아가 수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문을 보내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했다.

라. 기 타

● 금강산 투자업체들, 내일 현지방문 무산(7/10)

- 금강산관광 중단 4주년(12일)을 맞아 금강산 투자기업들이 추진해온 11일 금강산 방문 이 사실상 무산됨. 10일 통일부와 금강산기업인협의회(금기협)에 따르면 북측은 금기협 측이 전달한 금강산 방문 계획에 대해 이날 오후까지 답변을 해오지 않았음. 정부는 북 측이 방북 허가를 해주면 우리 기업들의 금강산 방문을 허용할 방침이었음. 북측은 개성공단 채널을 통해 "평양에서 방북 승인 여부에 대한 답이 없다"는 설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음. 금기협을 비롯해 금강산관광 주사업자인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등 총 15명은 11일 금강산을 방문해 북측이 몰수한 남측 자산의 실태 조사 등을 할 계획이었음. 북측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금강산에 끌어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또 최근에는 금강산지구 내 현대아산 소유의 식당인 '온정각'을 '별금강'이라는 이름으로 고치고 중국인 등을 상대로 영업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북측은 지난해 8월 금강산지구 내 남측 인원을 모두 추방한 이후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전까지 남측 인원의 금강산 방문을 허용했었음.
- 이번 방북계획에 대해 북측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김 위원장 사망에 대한 남측의 조문 문제를 제기하며 현 남측 정부와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임. 금기협 측은 이번 방북이 무산됨에 따라 광복절인 8월15일을 계기로 금강산 방문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음. 금기협은 30여 개의 중소 영세업체로 구성된 현대아산 협력업체 모임임.



● <北박의춘 ARF서 광폭 외교..7개국과 양자회담>(7/11)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을 위해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한 북한의 박의춘 (80) 외무상이 7개국과 양자회담 일정을 잡는 등 적극적인 외교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 었음. 2007년부터 ARF에 참석한 박 외상은 통상 중국이나 러시아 정도와 양자회담을 가졌지만, 올해는 미얀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세안 외무장관과도 회담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짐. 박 외상의 이런 행보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아세안 중시 외교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됨. 이날 새벽 2시 프놈펜 공항에 도착한 박 외상은 도착 당일부터 ARF가 열리는 '평화의 궁전'에 머물면서 양자 회담 일정을 소화함.
- 그는 오전 10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북·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1시간 남짓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양측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끊긴 북핵 대화 흐름을 되살려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짐. 박 외상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회담에선 역내 정치·안보 문제와 함께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짐. 외교부 당국자는 북측의 행보에 대해 "아세안에 '올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올해 상반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영일 노동당 국제비서 등 북한 고위급의 동남아 순방에서 보듯이 북측은 동남아 우선 전략을 쓰고 있다."고 설명함. 이 당국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온 아세안이 북측에는 비밀 언덕이 될 수 있다"며 "일부 아세안 국가에는 원조 등을 요청했을 수도 있다"고 말함. 박 외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은 12일 ARF 전체회의에 참석함. 한편,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은 전날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의 결과물로 채택된 의장성명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관련국들이 어떤 추가 도발도 해서는 안 되며, 유엔 안보리 결의와 2005년 이후 6자회담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이날 발표함.

● <김정은 부인說 고조..잇단 등장 배경 주목>(7/15)

- 최근 북한 매체에 잇따라 등장한 여성이 김정은 국방위 1위원장의 부인일 가능성에 무게가 크게 실리면서 북측이 이 여성을 공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정부 고위 소식통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 매체에 등장하는) 이 여성의 공간적 위치, 테이블 배치 등 의전적 관점에서 볼 때 부인일 가능성이 크며, 김 1위원장이 실제 결혼도 했을 것"이라고 말함. 정부 일각에서는 북측이 퍼스트레이디를 이런 식으로 공개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고, 여동생인 김여정일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 고위 소식통이 직접 김 1위원장의 결혼 가능성과 함께 최근 잇따라 그와 함께 등장하는 이 여성이 북한의 퍼스트레이디일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김 1위원장 주변에 대한 추적 작업이 상당부분 완료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음. 대북 전문가들은 이 여성이 김 1위원장의 부인이라면 그녀를 잇달아 등장시키는 배경은 김 1위원장의 안정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



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의 최대 약점 가운데 하나는 나이"라면서 "김정은이 이미 결혼을 해서 부인을 둔, 가정을 이룬 지도자라는 사실을 단계적으로 공개해서 안정감 있는 지도자 이미지 확산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함. 김 1위원장은 1983년 1월8일생, 우리 나이로 만 29세로 알려짐.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등장은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행태와도 확연히 대비됨. 김 1위원장의 모친인 고(故) 고영희를 비롯해 김 위원장은 적어도 4~5명의 부인을 뒀던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이들 여성이 '퍼스트레이디' 자격으로 공식 등장한 적은 없음.
- 북한 내 여성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남존여비' 사상이 여전한 북한에서 퍼스트레이디 공개를 통해 여성들의 환심을 사고, 따듯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을 시도하려 한다는 지적임. 북한의 의도가 어떻든 이 같은 최근 행보의 배경에는 1990년대 말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생 활을 하면서 서방세계의 문물을 경험한 김 1위원장의 개인적 경험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이와 맞물려 그의 이 같은 개인적 경험이 북한의 개혁·개방과 같은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분석도 나오고 있음. 실제로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의 개혁·개방 기대를 높이는 신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음.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17일 "김정은 동지는 인민을 잘살게 할 수 있는 우리식의 발전목표와 전략전술을 세워놓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인민의 총진군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 계신다."고 말해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를 높였음. 지식인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12일 "각급 당 조직은 당원들에게 내각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내달 1일부터 도입한다는 당 중앙위원회 방침을 전달했다."고 전함. 정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은 과거 스위스 유학을 하면서 독일, 파리, 일본 등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경험과 체험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비교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함. 그는 "김정은은 개혁개방을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통제를 잘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경제적으로 개혁·개방을 하면서 정치적 통제는 강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함. 그러나 최근 등장한 여성이 김 1위원장의 부인으로 최종 확인돼도 앞으로 북한의 개혁·개방과 바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음.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퍼스트레이디 등장이 사실일지라도 이를 당장 개혁·개방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그런 변화들이 앞으로 북한의 여러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될 수 있다"고 분석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미군 영외순찰' 개선 방안 논의키로(7/9)

-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 합동위 산하의 법집행 분과위에서 미군의 영외순찰 문제 개선 방안을 협의키로 했음. 양측은 미군 헌병의 한국 민간인 수갑 사건과 관련해 개최한 지난 7일 한미 SOFA 합동위원장 간 긴급협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9일 밝힘. 이 관계자는 "관행을 이유로 SOFA 규정이 잘 시행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민간인 수갑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가 끝나는 대로 현행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한미 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함. 한미 양국은 향후 논의에서 영외에서의 미군 경찰권 행사와 관련된 SOFA 협정문 22조 10항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영외순찰 범위·권한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임.
- SOFA는 22조 10항에서 미군 시설·영역 밖에서 미군 경찰은 미군 구성원 간의 규율과 질서유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한국 경찰과 연계 하에 경찰권을 행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이와 함께 내부 협의 등을 통해 SOFA에 규정된 대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미군과 합동 순찰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임. 법집행 분과위는 법무부와 주한미군 헌병대가 주무 기관이며 한미 양측은 분과위 논의 후 필요시 SOFA 합동위를 개최해 논의 사항을 확정할 예정임.

● 합참의장 "한미 군사동맹, 어느 때보다 튼튼"(7/10)

- 정승조 합참의장은 10일 전북 군산에 있는 미국 8비행단과 공군 38전투비행전대를 방문, 한미 연합공군의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음. 정 의장은 미 8비행단에서 비행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미8비행단은 한미 연합공군의 상징적인 부대로 지역 주민과 친선 교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신뢰와 존중을 받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역 주민과 교류를 더욱 확대해 긴밀하고 변함없는 한미동맹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함. 그는 이어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면서 "우리는 적도 발을 억제하고 적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하는 데 늘 함께할 전우"라고 강조함.

● <미군 '수갑 사용' 물의에 평택민심 술렁>(7/10)

- 최근 물의를 빚은 미군 헌병의 '민간인 수갑 사용' 사건으로 경기도 평택 지역 민심이 술렁이고 있음. 평택시 신장동 K-55 미군기지 앞 '로테오 거리' 상인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이번 일로 영업을 지장을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음.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오프 리미트(OFF LIMIT·업소 출입금지) 등 주한미군 권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10일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송탄지부



김동민 지부장은 "이번 일로 매우 흥분한 상인들도 있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사과했으니 일단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상인들도 있는데 양측 의견이 반반"이라며 상인들의 분위기를 전함. 그는 "손님의 90% 이상이 미군인데 '오프 리미트'를 당하면 피해가 크다"며 "미군에게 이런 권한이 있는지, 있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SOFA 규정을 검토해 보완해야 한다."고 했음. 미군 측이 업소 출입금지 조치를 할 때는 물론 해제할 때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상인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도 나옴. 송탄 상공인회 김영일 회장은 "우리 경찰이 합동순찰하지 않고 미군 측만 나와 순찰하니까 이번과 같은 불합리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반미감정 확산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함. 그는 "미군을 상대하는 상인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반미세력이 들어와 구호 외치고 자극해봐야 득이 되는 건 없고, '오프 리미트' 당하면 상인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함.

- 이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새누리당 평택갑 원유철 국회의원은 9일 성명서에서 주한미군의 사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 한미행정협정(SOFA)의 오해 소지와 모호성을 최소화하고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음. 진보신당 평택안성당원협의회(위원장 김기홍)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SOFA 규정을 위반한 초법적 월권행위라며 미 헌병대에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마련, 미군과의 분쟁 해결을 위한 평택시-미군 간 대민기구 설치를 촉구함. 평택 참여자치 시민연대도 논평을 통해 주한미군의 기지 밖 순찰과 '오프 리미트' 중단을 요구했음.

나. 한·중 관계

● 명젠주 오늘 방한..김영환 귀국시기 주목(7/12)

- 명젠주(孟建柱) 중국 국무위원 겸公安부장이 12일부터 2박3일간 한국을 방문함. 중국公安부장의 공식방한은 지난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처음임. 명 부장은 이날 오후 늦게 성남 서울공항으로 입국하며 13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권재진 법무부 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등을 만나 양국간 영사문제와 출입국 관리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임. 이어 14일에는 주(駐)제주 중국총영사관 개관식에 참석한 뒤 출국함.
- 명 부장은 이번 방한 기간에 중국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체포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 등 4명의 신변처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주목됨. 중국 당국은 김씨 일행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불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김씨 일행은 구금시설에서 풀려나 곧 추방형식으로 귀국할 것으로 전망됨. 외교가에서는 명 부장의 한국 방문이 끝난 뒤 김씨 일행이 귀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음.



● 반기문, 내주 中 방문…후진타오 만나(7/14)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달 16일(미국시간) 중국을 방문한다고 중국 신문망(中國新聞網)이 14일 보도함. 반 총장은 중국 방문 중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과 만나고 오는 19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제5차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장관급회의 개막식에도 참석함. 이 개막식에는 후 주석과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 아프리카 6개국 정상들도 자리를 함께 함. 반 총장은 중국에 이어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등 발칸반도 국가들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중국 신문망이 전함.

다. 한·일 관계

● 근로정신대-日 미쓰비시 배상협상 결렬(7/9)

-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동원 피해를 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피해배상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근로정신대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향후 반(反) 미쓰비시 운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음. 시민모임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도쿄, 나고야에서 16차례에 걸쳐 협상했으나 미쓰비시 측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개인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음.
- 또한, 지난 5월 24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음.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9명과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 지원단'은 그동안의 협상에서 근로정신대에 관한 역사적 사실 인정 및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 중공업 측의 공식 사죄, 미지급임금과 위자료 등 지급 등을 요구해왔음. 지원단은 지난 6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미쓰비시가 기금을 출연해 '한일 과거·평화·미래 재단'을 운용할 것을 제안했음.
-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기금운영에 지원단이 관여하는 것은 개인 보상으로 비칠 수 있다며 거절, 일본 재단법인을 위해 한국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 시민모임은 할머니들이 70여 년간 공식 사과조차 받지 못한 데는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탓도 있다고 비판하며 앞으로 일본 시민사회 등과 연대해 한·일 양국에서 반(反) 미쓰비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도 성명을 통해 "미쓰비시 중공업이 애초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일본의 양심 있는 세력을 모아 연대 투쟁할 의사를 전달했음.



● "소년상 '말뚝' 항의" 日대사관에 차량 들진(7/9)

- 9일 오전 4시55분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김모(62)씨가 자신의 1t 트럭을 몰고 와 대사관 정문을 들어받음. 김씨는 대사관을 경비하던 경찰에게 붙잡혔음. 충돌 여파로 대사관 정문이 1m가량 밀렸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음.
- 경찰은 "일본인이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설치한 데 항의하려 했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음.

● "ARF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열지 않기로"(7/10)

-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고려해 '캄보디아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열지 않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함. 통신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12일 부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지만 한일 양자 회담은 열지 않기로 함.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양측 모두 회담을 열자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나 한일 정보협정 서명 연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외교통상 부 장관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참석하는 한·미·일 3개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대면할 예정임.

● 김외교 "한일협정 비공개처리 보고 못 받아"(7/11)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의 한일정보보호협정 비공개 처리 논란에 대해 "(국무회의 당시) 그런 상세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함.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협정을 처리 한다는 것을 보고받았느냐"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의 중남미 방문을 수행 중이었다."며 이같이 답했음. 김 장관은 "대통령은 (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대외주의'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됐다."고 밝힘. 그는 협정 명칭 변경에 대해 "가서명까지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었으나 내부협의를 거치면서 군사정보가 정보가 아닌 군사에 방점이 찍혀 군사동맹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군사'를 삭제하는 의견이 나왔다"며 "국방부, 청와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 이를 일본에 제의했고 일본이 동의했다"고 밝힘.
- 김 장관은 또한 "미국 정부가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여러 경로를 통해 강력히 희망 했다는 말이 있다"는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의 질문에 "미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함.
- 그는 "궁극적으로 한일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문에 "한일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타협하지 않지만 이웃 국가로서 일본과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답함. 김 장관은 또한 "(한일) 정보교류가 군사동맹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말함. 그



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며 완전 중단 방침을 재확인했고 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힘.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자신의 사퇴를 촉구한데 대해 "지적 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다."고 밝힘.

라. 미·중 관계

● 中, 美 '센카쿠 공동방어' 발언에 반발(7/10)

- 미국이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가 미일 공동방어 대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강한 불만을 제기함.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을 향해 "엄정한 우려와 결연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밝힘. 류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가 미일안보조약 5조 적용 범위에 다오위다오가 포함된다고 언급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다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 영토로 중국은 이에 대한 다툼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함.
- 류 대변인은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일본이 중국 영토인 다오위다오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고받은 것은 완전한 불법으로 무효"라고 강조함. 류 대변인은 이어 "미일동맹은 냉전시기의 산물로 이는 미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라며 "이는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교토통신은 미국 국무부의 한 고위 당국자가 "센카쿠 열도는 1972년 오키나와(沖繩) 반환의 한 부분으로 일본에 반환된 이후 일본 정부의 행정적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1960년 체결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10일 보도함.
- 미일안보조약 5조는 '미일 양국은 일본의 행정력 아래 있는 영토에서 미국 또는 일본 측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 자국의 헌법상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협에 대처 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패트릭 벤트렐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당사자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길 원한다."며 "센카쿠 열도의 최종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고 말함.
- 지난 7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다오위다오 국유화 방침을 밝힌 이후 중국은 강한 어조로 일본을 비판하면서 다오위다오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양국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음. 중국의 힘이 쇠약해진 청일전쟁 와중인 1895년 일본은 다오위다오가 주인 없는 섬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다오위다오를 오키나와 관할에 두고 관리하다가 1962년 오키나와와 함께 일본에 넘겼고 이후에는 일본이 다오위다오를 실효 지배 중임.



● <거침없는 클린턴..몽골서 '중국 때리기'>(7/10)

- "정치 개혁이 담보되지 않은 경제적 성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결국은 사회불안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방정식이다." 아시아를 순방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9일 (현지시간) 몽골에서 열린 민주화 운동가 국제포럼에서 한 말임. 클린턴이 몽골을 찾은 것은 그간 군사적 분야에 치우친 아시아 외교정책의 중심을 경제 쪽으로 조정하려는 차원으로 읽힘. 미국과 중국 업체는 현재 몽골 타반 톨고이의 광산개발권을 놓고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음. 뉴욕타임스(NYT)는 클린턴이 이날 연설에서 중국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 메시지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분명했다고 인터넷 판에서 보도함. 클린턴은 연설에서 "정치 해방 없이는 중국적으로 경제 해방을 이룰 수 없다"며 "정치적 의사 표현을 단속하고 국민의 눈과 입, 귀를 통제하는 것으로 치안이 유지된다는 환상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 환상은 결국 사라진다."고 했음. 그는 "경제 개방과 언론자유 폐쇄를 병행하는 국가들은 비용을 치르게 돼있다"며 "그런 접근법은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임. 10여 년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구가하다 최근 경기둔화에 빠진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음.
- 민주적 가치가 서구사회에만 적용된다는 리관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의 1990년대 논리도 정면으로 반박함. 비정부기구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일하게 아시아에서만 정치적 자유와 시민권이 꾸준히 성장했다는 것임. 반면 아시아에서도 민주화를 이룬 나라와 달리 어떤 국가는 24시간 내내 자국민의 정보 접근을 통제하고 민주 운동가를 구금하며 지도자를 스스로 뽑을 시민권을 유린하는 국가들도 있다고 빈정댔음.
- NYT는 어법에서 아주 명쾌하고 모호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클린턴의 이런 발언이 중국으로서는 아주 민감한 시기에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력 교체기를 맞아 최고권 부 내에서 전례 없는 이진투구 양상이 벌어지고, 환경을 비롯해 각종 사회적 이슈를 놓고서도 사면초가로 내몰리는 중국을 향해 작심한 듯이 거침없는 표현들을 쏟아냈다는 인식임. 최근 미국은 몽골을 독재에서 민주국가로 전환된 대표적 성공 사례로 여기면서 관계 개선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뉴욕 타임스는 봤음.
- 실제로 최근 양국 협력관계는 날로 좋아지고 있음. 미국은 매년 몽골에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면서 학생 수 천명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있고, 몽골은 미국의 요구대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견했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백악관에서 차히야긴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했고, 조 바이든 부통령은 몽골로 건너가 '찬란한 민주주의'의 개화를 칭송하기도 했음. 클린턴도 이날 울란바토르에서 엘베그도르지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서방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가 몽골이다. 그게 의심된다면 직



접 몽골에 와보면 된다."고 지켜세웠음. 이날 NYT는 해외 판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을 통해 클린턴 장관이 아시아 순방에서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이는 미국 아시아 외교의 중심이 군사에서 경제로 옮겨지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마. 미·일 관계

● 日 외상 '위안부 '성노예' 표현은 틀린 것'(7/10)

-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이 10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표현했다는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겐바 외무상은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클린턴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표현했다는 한국 언론 보도와 관련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 국무부와 일본 외무성 간에는 '성적 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만약 '성적 노예' 라는 표현을 미 국무장관이 사용했다면 지금까지 총리의 사죄 표명, 위안부 지원을 위한 아시아여성기금 창설 등의 조치를 설명하고 '성적 노예'라는 말은 틀린 표현이라고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일부 언론은 미 국무부가 장관에게 한일 과거사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클린턴 장관이 "위안부라는 말은 틀렸다. 그녀(위안부 할머니)들은 강제적 성노예였다"고 바로잡았다고 보도했음.

● 美, 日에 센카쿠 국유화방침 설명 요청(종합)(7/10)

- 미국이 일본 정부에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방침과 관련한 설명을 요청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인터넷 판에서 미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지난 8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 측과의 회담에서 센카쿠 국유화 방침과 관련한 설명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일본 측이 향후 수시로 (센카쿠 국유화 방침과 관련) 우리에게 설명하기로 했다"면서 "우리의 관심은 우선 일본의 생각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함.
- 하지만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클린턴 장관과의 회담 당시 (센카쿠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고 부인했음. 한편 교도통신은 미국이 일본과 중국 및 대만 간에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음. 이 통신에 따르면 패트릭 벤트렐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9일 (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민간 소유인 센카쿠 열도 일부 섬을 매입하려는 계획과 이에 따른 중국과 대만의 거센 항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은 당사자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길 원한다."고 말함. 벤트렐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센카쿠 열도의 최종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며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이 섬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분명히 했음.



바. 미·러 관계

● 푸틴, 美정치인 反러 발언에 경고(7/10)

- 미국 정치인들이 대(對)러시아 강경 발언으로 점수를 따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고 블 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경고했음.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현재 미국에선 뜨거운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러) 강경 발언을 통해 추가 점수를 얻고 이미 오래전에 버렸어야 할 이데올로기적 공포를 상기시키려는 유혹이 커졌다"며 "우리는 이 모든 움직임을 보고 있으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음. 푸틴은 그러면서 "국내정치 문제를 그러한 식으로 해결하는 관행은 이미 오래전에 버렸어야 한다."며 이 때문에 국제관계가 훼손되고 있다고 꼬집었음.
- 푸틴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최근 몇몇 행동은 러시아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반(反)소련 법인 '잭슨-베닉 수정안'을 다른 반러 법안으로 대체하고, 전략적 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유럽 미사일방어(MD)망 구축 계획을 강행하려는 움직임 등은 러시아의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함. 미국이 1970년대에 채택한 잭슨-베닉 수정안은 미국과 러시아의 무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직도 유지됨. 미국은 최근 러시아내 영국 투자펀드 회사에서 근무하다 러시아 관리들의 대규모 횡령사건을 고발한 뒤 기소돼 2009년 현지 구치소에서 사망한 러시아인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사건 관련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마그니츠키 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 푸틴의 발언은 미국이 잭슨-베닉 수정안을 폐지하려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동시에 마그니츠키 법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임. 동시에 미국이 러시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함께 밀어붙이고 있는 유럽 MD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도 거듭 일침을 놓은 것임.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와 유럽 간 협력 수준이 잠재력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면서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단일 시장을 창설하자고 유럽연합(EU) 측에 제안했음. 푸틴은 "EU와의 협력 수준이 정치·경제적 잠재력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유럽과 함께 대 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수조 유로 규모의 단일 시장을 창설하는 원대한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러, NGO 통제법 채택 비판한 미국에 역공(7/14)

- 러시아 정부가 자국 의회의 반정부 성향 비정부기구(NGO) 통제 및 인터넷 검열 강화 법안 채택을 비판한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13일(현지시간) 인권·민주주의·법치 담당 특사 명의의 논평을 내고 "러시아의 NGO 법안과 어린이들을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등에 대해 미국 관리, 특히 국무부 대표가 우려를 표시하는 성



명을 낸 것에 주목한다."며 이는 러시아의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공격함. 외무부는 "이 같은 시도는 헌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루어지는 러시아 국가 기관의 활동과 주권적 입법 절차에 대한 아주 적절치 못한 무례한 간섭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함. 논평은 이어 "러시아도 미국 의회의 특정 논의나 결정에 항상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입법 활동에 대한 간섭 시도를 철저히 자제해 왔다"며 "러-미 양국의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에 중요한 이 같은 문제에서 상호주의가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요구함. 지난 11일 패트릭 벤트렐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러시아 하원이 외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자국 내 NGO를 통제하는 법안을 심의하는데 우려를 표시한 바 있음. 이에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NGO 법안은 러시아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13일 외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정치적 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NGO)에 '외국 기관'이라는 낙인을 찍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킴. 이에 야권이나 시민단체 등은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가 새로운 법을 통해 반정부 성향의 NGO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함. 러시아에서 '외국 기관'이라는 표현은 옛 소련 시절 자국 내에서 암약하던 외국 스파이나 국가반역자 등을 연상시키는 부정적인 표현임. 새 NGO법에는 외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NGO들에 '외국기관'이란 꼬리표를 붙임으로써 정부 편이 아닌 NGO들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임. 하원은 이에 앞서 11일 불법 콘텐츠를 갖춘 인터넷 사이트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법 개정안도 통과시킴.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된 인터넷 사이트들을 관계 당국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법안임. 하지만 정보관련 업체들과 시민단체 등은 이 법안도 무분별한 인터넷 검열에 악용될 수 있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총선 이후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인터넷 언론이 반정부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한 점을 들어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 비판을 제기하고 있음.

사. 중·일 관계

● 中 신화 "日の 다오위다오 국유화는 불장난"(7/9)

- 중국의 언론매체들이 일본 정부의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尖閣)) 국유화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영 신화통신은 8일 일본 정부의 그런 시도는 한마디로 "불장난"과 다를 바 없는 코미디극이라고 공격했음. 통신은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본 내의 다오위다오 매입 모금 운동 등과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으나 실제 그 배후에 있었던 게 이번 국유화 방침 발표로 확인됐다"면서 "이로 말미암아 중일 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통신은 아울러 일본 정부가 다오위다오를 국유화하려는 건 일본 내 정치상황과 연관이 있다



고 비난함.

- 애초 극우 인사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지사가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려 닌오 위다오 모금 운동을 촉발하고 여론몰이에 나서면서 여당인 민주당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 되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아예 닌오위다오 국유화에 나섰다 해설임. 통신은 일본 정부가 중일 관계는 내팽겨둔 채 닌오위다오 국유화 코미디의 "주연"으로 나섰다 고 비꼬았음.
-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인터넷판에서 신화통신의 이 기사를 게재했음.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도 9일 일본 정부의 닌오위다오 국유화 방침은 중일 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면서 이로써 양국관계에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강조함. 앞서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7일 밤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자국의 신성한 영토인 닌오위다오 매매를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강조함. 류 대변인은 "닌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로, 중국은 쟁론할 여지가 없는 역사적, 법적인 근거가 있다"며 "그런 중국의 신성한 땅을 매매 대상으로 삼는 것을 결연히 반대할뿐더러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닌오위다오 주권 수호 조치를 계속 취해갈 것"이라고 밝힘.

● 中외교부, 조어도 순찰은 "정상적인 공무수행"(7/11)

-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11일 중국 정부 선박의 조어도(중국어명 닌오 위다오 · 일본명 센카쿠열도) 진입과 관련해 "정상적인 공무 수행"이라고 강조함. 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닌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영토"라며 "중국 어정선(漁政船 · 어업 지도선)이 법률에 따라 관할 해역에서 휴어기 관리 조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순항하면서 감시를 하고 있었고 이는 정상적인 공무"라고 말함. 그는 "그래서 중국은 일본이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힘. 그의 이런 언급은 일본 정부의 항의에도 중국은 조어도에 지속적으로 어정선을 보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중국 정부를 대변하는 관영 신화통신도 자국 어정선은 동중국해에서 '정상적인 순찰'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보도함.
-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새벽 4시30분께 센카쿠열도의 쿠바(久場) 섬 인근 일본 영해에 위성 204호를 비롯한 중국 어정선 3척이 들어와 마찰이 빚어졌다고 밝힘. 일본정부는 이를 영해 침해로 간주하고 일본 주재 중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강력하게 항의함.

아. 중 · 러 관계

● <러시아가 美 주도 림팩 훈련 참가한 이유>(7/10)

- 러시아가 올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해상 연합 훈련인 '림팩(RIMPAC · 환태평양훈련)'에 처음으로 참여한 것은 유사시 미국을 중국 견제용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줄타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러시아 전



문가들이 10일(현지시간) 해석했음. 러시아는 지난달 말부터 히와이 인근 해상에서 시작된 아시아태평양지역 22개 국가들의 연합 해군 훈련인 림팩에 태평양함대 소속의 '판텔레예프 제독함'을 파견함. 7천400t급 대형 함정으로 약 300명의 병력과 함께 8기의 로켓-어뢰와 64기의 미사일, 대공포 등으로 무장하고 있음. 지금까지 림팩 훈련에 참관단만을 파견해온 러시아가 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처음임.

- 이타르타스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모스크바 정치 전문가 이고리 제벨레프는 "러시아의 림팩 훈련 참가는 러시아와 미국이 관계 재설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긴 하지만 국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중국 요소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강국 중 유일하게 이번 훈련에 초대받지 못했음. 중국 대신 러시아를 초대한 것은 미국이 러시아를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들과 연합해 하루가 다르게 세력을 키워가는 중국에 공동으로 맞서는 군사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해석임.
- 모스크바 카네기 센터 소장 드미트리 트레닌은 "러시아는 지난 15년간에 걸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지나친 대중 밀착은 러시아를 중국의 '하위 파트너'로 전략시킬 위험이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며 "러시아가 전략적 독립성과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현지 유력 통신 '리아 노보스티'의 군사전문기자 콘스탄틴 보그다노프도 비슷한 견해를 밝힘. 그는 "러시아가 (지난 4월) 중국과의 합동해군 훈련에 이어 미국이 주도하는 림팩-2012 훈련에 참가한 것은 역대 두 핵심 강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적 대외정책을 취하려는 전략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함.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 4월 22~27일 중국 칭다오(靑島) 주변의 서해해역에서 대규모 합동 해군 훈련을 벌인 바 있음. 보그다노프는 "이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아직 약자로 남아있는 러시아의 자연스런 행동 노선"이라며 "러시아는 잠재적 전략 파트너인 21세기의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줄타기 행보를 선보이고 있다"고 설명함. 현지 라디오 방송 '골로스 로시이(러시아의 목소리)' 군사전문기자 일리야 크람니코도 "미국과의 합동 해군 훈련은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할 경우 중국의 대안으로 미국을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실용적 행보"라고 해석함.
- 림팩은 유사시 태평양 상의 중요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안국 해군 간의 연합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격년제로 실시하는 다국적 해군 연합기동훈련으로, 지난 1971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실시돼 오고 있음. 지난달 29일 시작돼 다음달 3일까지 계속될 예정인 '림팩 2012'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22개국 함정 및 항공기 등과 약 2만5천명의 병력이 참가하고 있음.



자. 기. 타

● 대만, '中 공격' 대비 미사일 발사훈련(7/9)

- 대만이 유사시 중국의 공격에 대비한 육·해·공군 합동 미사일 훈련에 들어감. 대만 국방부는 9일 남부 핑둥(屏東)현 주평(九鵬)기지에서 대구 모 실탄 발사 훈련을 시행한다고 연합보가 보도했음. 이번 훈련에는 지대공(地對空), 공대공(空對空) 등 26기의 최신형 미사일이 투입됨. 중국의 해군력 확대를 겨냥해 개발한 반함(反艦) 미사일인 '송평 2'도 선보임.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600~800km에 달해 상하이(上海), 홍콩, 선전(深천<土+川>) 등 중국 동남부 지역을 직접 타격할 수 있음. 대만은 이 미사일 개발 및 생산에 300억 대만달러(약 1조2천억원)를 투자했음.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명이 붙은 '송평(雄風) 3' 미사일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되었음. 중국 첫 항공모함인 바랴그호의 공식 취역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초 훈련에 송평 3 미사일이 등장할 것으로 관측되었음. 군 당국은 또 지난해 연례 군사훈련에서 낮은 명중률을 보였던 마취(麻雀) 미사일의 경우 미국 측이 종합적인 문제점 조사에 착수한 사항이어서 훈련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음. 작년 1월 훈련에선 19기 중 6기가 목표물을 맞히지 못해 논란이 되었음. 대만은 지난해 11월 중국의 침공을 가정한 육·해·공군 합동 군사훈련을 20여 년 만에 재개하는 등 양안 화해 분위기 속에 최근 돌발 상황에 대비한 실전훈련을 확대하고 있음.

● <中, 남중국해 '행동수칙' 논의 합류에 촉각>(7/9)

- 중국이 동남아 국가연합(아세안)과 더불어 남중국해 분쟁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 논의에 나선 가운데 실효성 있는 합의를 할 수 있을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중국은 8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남해각방선언의 '행동수칙(Code of conduct)' 제정을 위한 차관급 회의에 푸잉(傅瑩) 외교부 부부장을 보냈음. 이는 중국과 아세안 간 첫 장관급 회의에서의 이견을 '조율'하려는데 목적을 둔 회의였음.
- 중국은 2002년 11월 아세안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 무력행사 불용을 골자로 한 남해각방선언에 합의했으나 그 하위단계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행동수칙안 제정을 위한 협상은 거부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푸잉 부부장의 회의 참석은 이례적임. 베이징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은 아세안과 한차례 더 차관급 협의를 하고서 오는 9월 프놈펜에서 남해각방선언 행동수칙안 제정을 위한 첫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사실 남해각방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빈 껍데기' 합의라는 지적을 받아왔음. 실제 몇 년 새 남중국해에서 상시화한 중국, 필리핀·베트남 간의 갈등과 분쟁에 남해각방선언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해왔음. 그런 탓에 강제력 있는 행동수칙안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그러나 이런 상황을 역으로 들여다보면 중국이 현행 남해각방선언을 유지하려는 속내가 보임. 중국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남해각방선언을 그대로 둔 채 G2(주요 2개국)의 경제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로 남중국해 주변국을 압박해 남중국해를 '독식'하려 해왔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임. 중국은 말로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불개입, '구동존이'(求同存異·같은 것은 추구하고 이견은 남겨둔다), 평화적 해결이라는 3원칙을 주장함. 그러면서 행동은 공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실제 중국은 근래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의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이 자국 땅이라며 두 달 가까이 해상대치를 감행해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음.

- 아울러 필리핀과 베트남 등도 실효 지배 중인 난사(南沙)·시사(西沙)·중사(中沙) 군도를 묶어 담당하는 썌사(三沙)시를 출범시켜 행정력을 강화했음. 분쟁해역인 남중국해에 3천급 이상이 포함된 해양감시선 편대를 파견해 버젓이 12일간 순찰활동을 하기도 했음. 그러고서 중국 정부는 곧 남중국해 도서에서 야생동물 조사에 나선다고도 했음. 한마디로 남중국해의 모든 도서는 중국 땅이라며 '주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임. 이런 탓에 필리핀과 베트남 역시 미국 등과 연대를 시도하면서 중국에 '강수 대(對) 강수'로 맞서는 형국임. 언제든 갈등이 무력행사로 촉발될 수 있어 남중국해가 화약고가 돼 가고 있음.
-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도 남중국해의 전략적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개입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음. 미국은 남중국해와 가까운 호주 북부에 미군 기지를 설치하고 미국·일본·인도 3각 안보동맹을 구체화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음. 미국은 그러면서도 남해각방선언 행동수칙 합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음. '제도적인' 분쟁 조절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임.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초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에서 행동 수칙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2일부터 프놈펜에서 열릴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서 이를 재차 역설할 것으로 예상됨. 상황이 이런 탓에 중국 역시 주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중국이 그동안 거부해온 남해각방선언 행동수칙안 마련 논의에 발을 담글 수밖에 없었고 일정 정도 입장 변화를 해야 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임. 그러나 중국이 그동안 어디까지 양보할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움. 아세안의 남해각방선언 행동수칙안 합의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일단 남중국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조율하는 강제력을 부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됨.
- 아세안과 중국은 앞으로 태국에서 한 차례 더 차관급 회의를 하고 조정을 한 뒤 9월 장관급 첫 실무회담에서 행동수칙안의 가닥을 잡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아세안 연례장관회의 내일 프놈펜서 공식개막(7/9)

- 아세안을 주축으로 한 연례 외교장관회의가 10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됨. 연례 외교장관 회의는 한·아세안 및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로서



동아시아 역내 정치 및 안보 문제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아·태 지역 27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12일 개최되는 ARF 회의는 북핵 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미얀마 민주화 등 지역·국제정세를 다루고 역내 신뢰구축조치 등도 논의됨.

- 9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ARF 회의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박 의춘 북한 외무 상,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양제츠 중국 외교부 장관,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 세 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 6자회담 당사국 외교장관이 모두 참석함. 이번 ARF를 계기로 남북 혹은 북미 접촉이 성사돼 북핵 대화 모멘텀이 살아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냉각된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국 접촉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함.
 - 정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과 미국, 북한의 대표단에서 북핵라인은 빠 져 있다"며 "현재로선 남북 혹은 북미 접촉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함. 우리 정부는 남북 접촉에 연연하기보다는 ARF 회의결과로 나올 의장성명에 북한으로 하여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 의 1718, 1874호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 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앞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10일 열리는 아세안+3 외 교장관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금융협력 및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II) 추진 방안 등을 집중 토의할 예정임. 같은 날 개최되는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선 한-메콩 협력기금 신설 등이 논의되고, 다음날 열리는 한·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선 한-아세안 산림협력 협정 등을 놓고 참가국들이 머리를 맞댈 예정임. 12일 열리는 EAS 외교장관회의에선 미국과 러시아의 신규 참여를 계기로 EAS의 역할 및 향후 운영 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일 정보 보호협정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마치는 대로 출국, EAS 외교장관회의와 ARF 전체회의, 한미일 외교 장관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며 김 장관이 참석하지 못하는 외교장관회의에는 김성환 외교부 제2차 관이 대리 참석함.
- **日-아세안, 중국과의 분쟁 해역 공동 해결책 모색(7/10)**
-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동남아국가 연합(아세안)이 해상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정상회담을 2013년 말 열기로 했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들이 10일 밝혔 음. 소식통들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이 11일 캄보디아에서 일본-아세안 간 특별 정상회담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일본과 아세안 정상들은 특별 회담이 개최되면 역내 해상 안보 강화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아세안 당국의 이런 방침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됨. 소식통들은 "일본과 아세안 국가들은 해상 안보와 관련,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특별 정상회담에서 역내 경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음.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에는 베트남을 비롯해 필리핀, 미얀마,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포함돼 있음.

● <日총리 집단자위권 밀어붙이기' 내부서도 비판>(7/11)

-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 언론과 정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음. 민주당의 실력자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는 10일 좌파 그룹 의원 모임에 참석해 노다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 외교안보 정책 우경화에 대해 "이 정권이 자민당·노다파 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음.

◇ 노다, 자민당형 보수 우경화 = 노다 총리는 자민당이 지난 6일 총무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자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부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논의를 수렴하겠다."고 말함. 정부 내에서는 노다 총리가 주도하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추진도 자민당이 지난 5월 내놓은 차기 총선 공약을 실천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노다 총리가 자민당의 정책을 앞장서서 실천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데 대해 자민당도 생뚱맞다는 반응임. 자민당의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간사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자민당이 결정하거나 추진하는 것을 총리가 뒤쫓아 오는 것에 대해 당돌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말함.

◇ 내각 법제국도 당혹 =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을 사실상 결정하는 내각 법제국도 노다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당혹하고 있음. 내각 법제국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금지한 헌법 9조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유는 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견지하고 있음. 따라서 외무성과 방위성 등이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을 개정해 PKO에 참여한 자위대가 기지 밖에서 발생한 국제기관 직원 등에 대한 테러에 무력사용 허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조직에 의한 공격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음.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PKO 협력법 개정 문제와 관련 "유감스럽게도 내각 법제국을 포함해 정부 전체에서 최종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함. 요미우리신문은 11일 "노다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등 안보 정책에서 자민당에 추파를 던지는 등 국정 운영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내각 법제국이 신중한 자세를 보여 PKO 협력법 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함. 이 신문은 노다 총리가



작년 11월 측근 의원에서 "입기 중에 해야 할 세 가지 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PKO 협력법의 근본적 개정,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를 꼽았다"면서 이 세 가지가 실현되면 외교 안보 면에서 업적을 남기는 것으로 생각해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함.

- ◇ 향후 정계 재편 대비 포석 = 노다 총리의 이런 행보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전 민주당 대표 그룹의 탈당으로 중의원 과반이 불안한 상황에서 자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끌어들이며 국정 운영에 안정을 기하고 올가을 예정된 민주당 대표 경선, 차기 총선 등에 대비하자는 포석으로 해석됨. 아사히신문은 노다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과 센카쿠 국유화 등에서 보수 색채를 강화하는 것은 자민당 쪽으로 정책을 근접시켜 앞으로의 정계 재편에 대비하자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도쿄 신문은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지난 7일 기사에서 "노다 총리가 의장인 국가전략회의의 분과위원회가 헌법으로 금지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제언한 것은 노다 정권의 매파(강경파) 체질을 짙게 반영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함. 이 신문은 "이웃 국가의 반발을 부를 중요한 정책을 몇 차례 회의를 통한 얼렁뚱땅 논의로 변경하려는 것은 원전기본법의 기본방침에 안보 목적을 집어넣은 것과 상통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적 논의 없이 정책화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발함.

● 러, 첨단방공미사일 S-400 운용부대 추가 설치(7/11)

- 러시아가 올해 안에 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 'S-400 트리움프(승리)'를 운용하는 다섯 번째 연대를 창설, 배치할 계획이라고 파벨 쿠라첸코 공군 부사령관이 11일(현지시간) 밝혔다. 현재 러시아군은 모스크바 인근에 2개 연대, 발트함대 소속 1개 연대, 극동 나홋카에 1개 연대 등 모두 4개의 S-400 연대를 운용하고 있음.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쿠라첸코 부사령관은 S-400 생산을 맡은 군수업체가 올해 말까지 다섯 번째 연대 창설에 필요한 S-400 미사일 인도를 약속했다고 전함. 쿠라첸코는 그러나 다섯 번째 연대가 어디에 배치될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군사기밀"이라고 답함. 2007년부터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된 S-400은 600km 거리에 있는 적의 전투기, 순항 및 탄도 미사일 등을 포착해 60~400km 거리에서 격추할 수 있는 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임.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